

현안과 과제

시진핑의 방한 의미와 협력과제

1. 시진핑의 방한 일정과 의미

-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은 양국간의 협력 강화를 넘어 동북아의 번영을 함께하려는 내실 있는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예정
 - **의미** : 이번 시진핑 주석의 국빈으로서의 단독 방한은 복잡한 동북아 형세를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지역내에서의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여는 한중간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도약을 의미함
 - **주요 일정**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는 7월 3~4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 첫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등 정계인사들과 회동하고 이틀째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중 FTA 논의, 삼성·현대차 등 재계인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
 - **주요 의제** : 이번 방한 기간 한·중은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할 전망
 - 중국 외교부는 이번 시주석의 방한이 국제 및 지역정세의 변화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할 거라 강조
 - 특히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한·중 FTA, 금융·산업 등에서도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 구축이 예상

< 시진핑의 역대 방한(訪韓) 목적 >

시 기	신 분	양국 관계	방한 목적
1995년	푸젠(福建省)부사	우호 관계	- 푸젠성에 대한 한국투자 유치
2005.7.18~24	저장(浙江省)부사	협력 동반자관계	- 저장성에 대한 한국투자 유치 - 정관계 고위급 인사 면담
2009.12.16~18	국가 부주석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한중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북핵문제 논의 - 정관계 고위급 인사 면담
2014.7.3~4	국가 주석	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	- 경제·산업 등 포괄적 협력 증진 논의 - 북핵문제 논의, 역내 평화공조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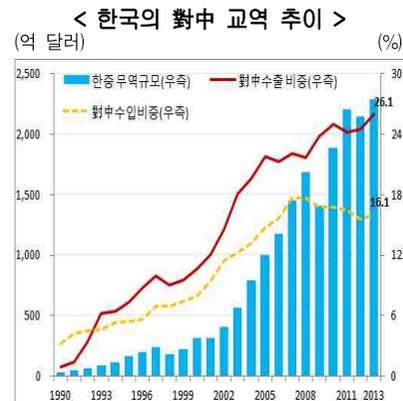
2. 한·중 간 경제 및 인적 교류 현황

○ (양국 경제 교류 지속 확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와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

○ (한·중 무역) 對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 1992~2013년 사이,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13년 2,289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
 · 동기간,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對中 비중은 1992년의 3.5%, 4.6%에서 2013년 26.1%, 16.1%로 대폭 확대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26.1%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 한국의 對中 수출 품목은 철강, 섬유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 1992년 철강관의 수출규모는 4.2억 달러로 對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
 · 반면, 2013년에는 반도체가 가장 많은 약 217억 달러를 기록, 전체 對中 수출규모의 약 15%를 차지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철강관	4.2	석유제품	16.8	반도체	216.7
2	합성수지	3.0	합성수지	15.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6
3	선재봉강 및 철근	2.4	전자관	12.3	합성수지	77.3
4	가죽	1.4	철강관	11.0	전자응용기기	78.8
5	인조섬유	1.3	가죽	7.6	석유제품	83.8
6	인조장 섬유직물	1.0	컴퓨터	7.4	자동차부품	55.7
7	종이제품	0.9	기타 직물	6.0	무선통신기기	51.6
8	섬유 및 화학기계	0.8	반도체	5.8	석유화학 중간 원료	62.1
9	석유제품	0.7	석유화학섬유원료	5.7	기초유분	44.6
10	기타 석유 화학제품	0.7	석유화학중간원료	5.1	철강관	3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국의 對中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 섬유, 시멘트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 1992년 식물성 물질의 수입 규모가 약 7억 달러로 對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2013년에는 반도체의 수입규모가 약 65억 달러로 가장 많음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식물성 물질	6.6	의류	8.7	반도체	65.2
2	원유	2.2	컴퓨터	8.2	컴퓨터	54.0
3	인조단 섬유직물	2.2	석탄	7.2	철강관	40.6
4	시멘트	2.1	식물성물질	6.9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9.0
5	석탄	2.1	반도체	6.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4.6
6	건직물	1.8	정밀화학원료	3.9	의류	34.1
7	곡식류	1.4	합금철선철및고철	3.8	무선통신기기	31.6
8	정밀화학원료	1.1	음향기기	3.5	정밀화학원료	28.2
9	면직물	1.0	석유제품	3.2	기구부품	23.0
10	기타농산물	1.0	어류	3.1	전선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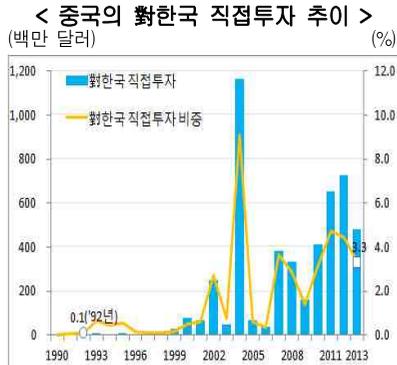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중 직접투자)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한중 상호간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회복
 -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2년의 1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로, 연평균 19%의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도 1992년 10만 달러에서 2004년 약 12억 달러로 급증하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완만한 회복 지속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주 : 신고금액 기준.

○ (인적교류) 양국 간 인적교류도 한·중 수교 이후 약 80배 증가

-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 명에서 2013년 789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
- 2013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397만 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392만 명으로 집계됨

< 한·중 간 상대국 입국자수 추이 >
(단위 : 만 명)

년도	1992	1998	2004	2010	2013
한국 → 중국	0	63	284	408	397
중국 → 한국	9	21	63	188	392
계	9	84	347	595	789

자료 : 한국관광공사, 中國國家旅游局.
주 : 입국자수에는 관광, 비즈니스, 친척방문, 유학 등 목적으로 한 입국자수 포함.

3. 한·중 주요 현안

① 한·중 금융·통화 협력 강화

○ 최근 양국 간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내에서 원화·위안화 활용 등 금융·통화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금융·통화협력을 강화
 - 지난 2008년 12월 중국과 18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 3,600억 위안으로 재연장을 함의
 - 이에 따라, 한국은 홍콩에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
- 더욱이 총수출 중 對中수출 비중도 20%를 상회하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
 - 총수출 중 對中수출 비중은 지난 2005년 21.8%를 기록한 후 2013년까지 9년간 20%를 상회하는 등 양국 간 교역이 급증

-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결제비중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의견 조율이 예상됨

< 중국의 주요 통화스와프 현황 >
(억 위안)



자료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

< 對中 무역에서 원화·위안화 결제 비중 >
(%)

구분		'10	'11	'12	'13	'14 1Q
		수출	원	0.8	1.1	1.0
위안	0.2		0.6	1.0	1.6	1.6
수입	원	1.5	1.6	1.4	1.4	1.4
	위안	0.1	0.2	0.3	0.7	0.8
對中수출/총수출		25.1	24.1	24.5	26.1	25.0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② 한·중 통상 협력 확대

○ 중국은 '지역중심의 개방전략'¹⁾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FTA 등 한국과 역내 통상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서 심도 깊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의 빠른 진전이 예상
 - 2013년 9월에 마친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에 대한 타격을 감안하여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상황
 - 2014년 5월 11차 협상에서는 양국 간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서 빠른 협상 진전을 보였음
-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중·일 FTA, RCEP, TPP 등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관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협상 조율이 전망
 - (한·중·일 FTA) 한·중·일간 역사 문제와 영토분쟁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진행이 어려움이 있음
 - (RCEP/TPP) 미국, 일본과의 지역경제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보다는 RCEP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중 통상문제 주요 관심 현안 >

구 분	협상참여국	주요현안
한중 FTA	한국, 중국	- 상품 분야 관세철폐 대상을 품목 수의 90%, 수입액의 85% 선으로 합의한 상황 - 서비스, 투자 등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 진행 중
한중일 FTA	한중일	- 현재 협상 초기 단계로, 국가간 민감분야를 고려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구
RCEP	한중일, 호주, ASEAN(10), 인도 등 16개국	- 협상주도권, 개방 수위를 놓고 참가국 간 이해관계 대립 중 - 중국이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TPP	美, 日,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	- 다자간 간 FTA로, 일괄적인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고도의 포괄적 자유화 협력 - 한국은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국은 소극적

1) '지역중심의 개방전략'이란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북아 등 역내에서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함.

③ 한·중 투자환경 개선

○ 양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 전면적인 투자 자유화 실현 등을 위해 서로 정책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투자관련 규제가 심한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가능산업 개방, 송금시간 단축, 투자 투명성 강화, 對中 투자지분 완화 등 사안도 논의될 전망
- 또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업체들의 중국 진출 통로가 더욱 다양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자본유출입 완화 일환으로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자본시장 투자한도를 2005년말 57억 달러에서 2014년 5월 현재 557억 달러로 확대
 - 국내 금융기관들도 중국 자본시장 진출을 위해 QFII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현재 국내금융기관 중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등 17개사가 30억 달러 규모 이상의 QFII자격을 취득한 상황

< 한·중 투자관련 규제 및 허용 분야 >

구 분	중 국	한 국
투자제한 산업	- 부동산개발, 철도여객운송, 통신 등 80개 분야는 외국인투자 제한 - 무기생산 등 39개 분야는 금지 - 최근에는 서비스, 하이테크 제조업 등 분야 개방 시도	-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은 외국인투자 금지
투자지분	- 천연가스·원유·오일세일, 자동차전자 제품, 민영항공기, 엔진제조 등에 대해 공동투자, 공동경영 조건 부과 -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철도망 건설 등에 대해 일정한 지분비율 책정	-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한국 선사와 합작투자 조건 부과 - 송·배전 등 12개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자료 : 중국상무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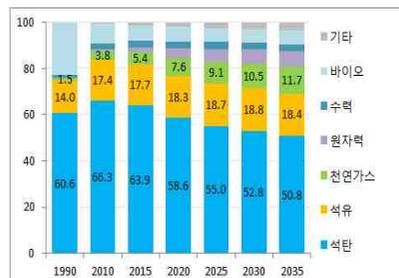
④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

○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급 합의 등 에너지 공급선을 중동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도 예상

- 중국은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 지역과의 에너지 협력 다각화 추진
 - IEA(2012)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석탄 수요는 1990년 약 61%에서 2035년 약 51%로 감소하는 반면, 천연가스 등은 수요가 동기간 1.5%에서 11.7%로 증가 전망
 - 중국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400억 달러를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달성 계획
 - 최근에는 2013년 5월 러시아와 30년간 천연가스 공급을 합의(2)하는 등 동북아 지역 내 국가와 에너지 협력도 강화(3)

- 한편, 중국은 스모그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환경 개선에 대한 기술 협력 관계가 예상됨
 - 2013년 말, 중국은 환경개선에 대한 기술교류에 대해 국내 환경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시작, 향후 환경개선에 대한 양국간 교류 확대 추진

< 중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 중국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



자료 : WTO, 중국환경분석 보고서로 현경연 재구성.
주 : 2012년 상반기 기준.

2) 중·러간 천연가스 협의에서 천연가스 공급가격은 10~11달러/mBtu(per Million British thermal units)/ft³ dir 0.36~0.39달러/m³으로 2018년부터 향후 30년간 약 2.7조 위안(4,461억 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
3) 한국도 최근 액화천연가스(LNG)보다 30%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013년 12월 2일,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가즈프롬(Gazprom)은 러시아 PNG 도입 일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⑤ 동북아 평화 유지 및 공동 번영 논의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을 포함한 다자 간 대화 재개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

-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시 주석의 '아시아 신안보관'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을 포함한 다자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
 - 평화협력구상이란 신뢰가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아시아 신안보관이란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를 키워드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스스로 지킨다'는 것임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한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은 문턱을 낮추어 6자회담의 즉각 재개를 통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이 필요

-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 등에 대한 한중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

- 중국은 일본의 역사 문제와 우경화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일관계에서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를 분리·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의견 조율이 필요

< 북핵 6자회담 일지 >

구분	시기
- 北, NPT 탈퇴 재선언	2003년 1월
-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 제2차 6자회담	2004년 2월
- 제3차 6자회담	2004년 6월
-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2005년 7-8월
-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2005년 9월
-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2005년 11월
- 北, 제1차 핵실험 실시	2006년 10월
-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2006년 12월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2007년 2월
-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2007년 7월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2007년 9월
- 北, 2차 핵실험 실시	2009년 5월
- 北, 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2월

자료 : 외교부.

< 한·중·일 정치외교 쟁점 >

구분	내용	
한일	역사	위안부 문제, 왜곡·부정, 고노담화 등 역사인식 문제, 전후 보상금 문제
	영토	독도문제 등
중일	역사	역사인식 및 과거청산 문제 등
	영토	센카쿠(釣魚島·다오위다오)·방공식별구역(ADIZ) 문제 등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전망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란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하나·창조·평화’의 대륙을 만들어나가는 국제협력모델을 의미⁴⁾
 - (하나의 대륙)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대 단일 시장화 추진
 - (창조의 대륙) 창조경제의 비전 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유라시아 문화교류를 통한 유라시아인의 공동번영 추진
 - (평화의 대륙)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평화와 안보 위협 해소 노력
-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 주석의 ‘新실크로드 경제구상’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예상
 -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중 간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유라시아 주요국 물류효율성 순위 >

지역	국가	종합순위	통관	물류시설	국제수송	물류 경쟁력
EU	독일	1	2	1	4	3
	영국	4	5	6	12	5
	프랑스	13	18	13	7	15
동북아시아	일본	10	14	7	19	11
	한국	21	24	18	28	21
	중국	28	38	23	22	35
북부아시아	러시아	90	133	77	102	80
	몽골	135	132	120	110	126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88	121	106	100	83
	우즈베키스탄	129	157	148	145	122
	타지키스탄	114	115	108	92	113
	키르기스스탄	149	145	147	127	151

자료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4) ‘2013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대외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공동주최, 2013. 10. 18).

4. 시사점

- 한·중 양국 및 역내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와 세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공동 추진
 -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 역내 금융부문 교류 확대에 대한 한·중 FTA 협상 등을 활용해 한국이 중국의 역외 금융 및 무역 허브로 부상할 기회 활용
 - 또, 향후 중국의 위안화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를 대비, 통화스와프 확대,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
- 한·중 FTA 협상은 향후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과 향후 중국의 경쟁력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을 고려해 분야별 단계별 협상안 제시 필요
 - 한·중 FTA 논의는 거의 10년이 되어가나, 양국 간 민감 산업에 대한 입장차로 실질적인 협상으로의 발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
 - 중국과 FTA 협상은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지역과 뉴질랜드 등 선진국 등과의 체결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단계를 모색해 단계별 협상 제시 필요
- 산업고도화 차원에서 가속되고 있는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양국 간 협력 및 관련 국내기업의 對中 진출 촉진 방안 모색
 - 중국 정부는 최근 대기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경 산업 육성과 과잉생산 산업 억제 등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분야에 대한 기술 및 장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뿐 아니라 분야별 협력과 지원 필요

- 아울러 양국 간의 환경관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연구, 우수 인재 교류, 협동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교류 확대 필요

○ **한·중 FTA 협상 등 각종 통상 교섭을 통해 한국 기업의 對中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올해 한·중 FTA 11차 협상에서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양국 간 의견이 교환되긴 했으나, 실질적인 규제 범위와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또한, 지난해 출범한 상해자유무역지대 시범구를 적극 활용, 향후 물류,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개방화에 대비한 진출 전략 강구가 필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인식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문제에 관한 한중 공동 대처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 체제 공고화 합의 필요

· 북핵 문제와 일본의 역사인식 등 동북아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남·북·중·일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한 공조 체제 강화 모색

- 남·북·중 3각 협력프로젝트 모색 등 북한의 유라시아 경제권 참여도 유도

· 유라시아 지역에 대륙 차원의 효율적인 복합물류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Road EXpress: SRX) 사업 추진 구상 마련 필요

·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간 교통·물류·운송체계의 구축과 중국의 창지투개발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수 있음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2072-6225)

이해정 연구위원 (hjlee@hri.co.kr, 2072-6226)

천용찬 연구원 (junius73@hri.co.kr, 2072-6274)